

## 전염병·경제 위기 하에서도

# 저항이 가능하다

관련 기사 2, 5, 12면

총선 코로나19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다	코로나19 수도권 감염 '폭발' 경고 기업 이윤 보호하려 위험 방지하는 문재인 정부	여성, 가족,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외출제한령이 신흥국들을 타격하다	4월 혁명 60주년 코로나 바이러스와 자본주의 위기	광양항 화물 노동자들 민중의 잠재력이 드러나다
2, 3면	4면	6면	7면	8~9면	11면

##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아래 제제)이다.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리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서써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 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자비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

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전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차별을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차별을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리(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 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있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증명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며 우리와 함께 합시다.

# 현대차 2차 하청 노동자들, 임금 삭감 맞서 파업하다

정동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현장위원

현대차 울산 1~5공장에서 라인 정비·수리업무(보전업무)를 담당하는 2차 하청업체(성진·마스터시스템) 비정규직 노동자 70여 명이 3월 31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사측이 주 52시간제 도입을 핑계로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여 하자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 노동자들은 그동안 주간에 10시간씩 일을 해 왔다. 그런데 사측이 임금 보전 없이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려 한다. 이렇게 되면 주말 특근까지 다 해도 월급이 60~70만 원 정도 깎인다고 한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인데다, 상여금, 성과급도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상당한 생활고를 겪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노동시간이 줄어도 일의 양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노동강도는 되레 강화된다. 사측은 주말 특근 의무화도 요구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불만이 크다.

노동자들이 공장 곳곳에 붙인 자필 호소문에는 절절한 외침이 가득하다.

“[임금이 삭감되면] 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저는 부모를 모시고 아이와 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주말도 없이 주 6회가량 초과 근무를 하고 이런 처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임금 보전과 토요일, 일요일 근무 자율화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 없는 주52시



출근 흉보전 중인 하청 노동자들

간제 도입을 주장하며 파업을 하고 있다. 하청업체 성진의 박찬철 조합원 대표는 말했다.

“우리는 2차 업체라는 이유로 1차 업체의 절반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현대차가 비정규직에게 코로나19 마스크를 차별 지급했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그 회사가 바로 우리 회사입니다. 회사는 1회용 방한대를 주면서 빨아서 쓰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현대차 공장이 휴업할 때도 우리는 출근을 강요 받았습니다. 출근을 안 하면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징계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항의해서 조합원들은 보름 가까이 파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비조합원들에게는 이를 유급 휴가를 줬고, 조합원들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이번에도 사측 안을] 거부하면 징계를 하거나 벌금을 물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노동

자들이 단체로 노조(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에 가입했습니다.

“우리는 생산 라인을 다니면서 정비하고 수리를 합니다. 우리가 파업해도 라인이 당장 서지는 않지만, 종종 발생하는 고장을 잘 고치지 못해서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4공장의 도장 라인이 한 시간 섰습니다.”

사측은 코로나19로 세계 자동차 시장이 위축되면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려고 안달이다. 이번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는 것도 그런 공격의 일부이다.

지금은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건 후퇴를 압박 받고 있지만, 나중에는 전체 현대차 노동자로 공격이 확대될 수 있다. 이번 파업에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합원들의 분위기는 뜨겁습니다. 조합원들이 쓴 호소문을 보고 정규직 노동자들도 함께 분노합니다. ‘정말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사실이냐?’면서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힘을 많이 받습니다.”

파업 노동자들이 부착한 호소문에서도 연대를 바라는 심정을 읽을 수 있다. 박찬철 조합원 대표는 정규직 노조(현대차지부) 집행부와 간담회도 추진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지부가 나선다면 우리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규직 활동가들이 지지 자보 등을 내주셔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지지 입장을 발표하는 등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지부 집행부가 연대에 나서라고 요구해야 한다. 기층의 활동가들이 이를 위해 노력하자.

##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나?

김문성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구실을 잘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나마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부문 관료들이 시스템 재정비를 한 것이 박근혜의 메르스 대응과 다른 점이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과도하다 싶은 적극 방역과 초기 대량 검사가 가장 큰 차이인데, 그것이야말로 메르스 대응에 실패했던 핵심 문제이기 때문이다. 불과 5년 전이라 정부 관료들 조차 학습 효과를 유지·발휘할 수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조차도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혼선(과로사까지 감수한)과 권위주의적 행정 수단, 정치적 마녀사냥을 이용해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보건 인프라(병상과 인력)가 열악하기 때문이 다. (코로나19 의심자가 아니라라는 이유로 입원이 거절돼 사망한 환자들이 생긴 이유) 문재인은 바로 이를 때를 대비해 공공 병원(병상)을 늘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청와대는 혼선의 주범이었다. 2월 13일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가 곧 종식될 테니,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자 발언해 역효과를 냈다. 또, 청와대는 신천지를 이용한 주의부산 효과를 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방침과 엇갈린 발표를 해 혼선을 일으켰다. 여당 지자체장들조차 상황의 심각성을 호소하는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거부하고 기업주와 경제 관료의 편을 든 것도 청와대다.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신천지 압수수색 운운한 것은 실소를 금지 못하게 했다. 범죄 혐의자가 증거를 감추거나 없앨 가능성이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압수수색이다. 그러므로 그 성공은 사전 보안과 신속함에 달려 있는데, 추미애는 압수수색할 장소를 공개 지목했다. 무엇보다 압수수색은 재판에서 범죄 혐의자의 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로,

전수조사를 위한 신천지 교인 명단 확보는 압수수색 방식으로는 불가하고 자진 제출이나 행정조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실제로 압수수색은 활용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중대본은 애초에 신천지 교회가 제출한 명단이 강제로 확보한 명단과 별 차이 없이 일치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마스크 공급 대책도 없이 마스크 안 쓰면 고의 전파자인 듯이 여론을 몰고 가다가(도덕적 공포와 책임전가 조장), 마스크 공급이 부족해지자 이번엔 건강한 사람에게 마스크가 필요 없다고 말을 바꿨다. 오히려 마스크의 공적 배분마저 시장경제적 방식을 고수하는 바람에 공급 부족으로 사람들이 위험하게 장사진을 치게 만들었다. 배송업체인 지오영 특혜(독점 공급, 이윤 보장, 현역 사병 인력 지원, 전 경영진의 여당 비례후보 공천)도 풀리지 않았다.

## 총선

## 코로나19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다

김문성

4월 5일 우파 야당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의 대표 황교안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했다.

그동안 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 긴급 지원을 확대하자는 제안을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의 턱없이 부족한 70퍼센트 가구 선별 지원 방안도 “매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래서 같은 당의 유승민이 7일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황교안을 비난했다. 통합당 의원의 상당수가 세계의 주요 정부들이 돈을 펴붓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도 서민 지원 증액에 반대한다. 물론 기업 지원에는 그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황교안은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하자고 했다.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 종로에서 고전을 하자 제1야당 대표가 당론을 무시하는 돌출 발언을 한 것이다. 이는 총선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 준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 그 대응 문제를 두고 각 정치세력이 충돌하고 있다.

3월에야 비례후보 명단과 순위를 확정한 주요 정당 중 민주당과 민생당이 비례 1번 후보를 보건 또는 코로나 대응 전문가로 내세웠다. 안철수의 국민의당도 그렇다. 문재인이 2차 추경을 해서 70퍼센트 선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라도 내놓은 것은 민주당이 선거에 이기려면 불가피하다고 압박한 탓이 컸다.

반면, 통합당은 반사이익 쟁기기에 더 집중했다. 중국발 입국을 막아야 했다는 얘기를 녹음기처럼 반복하며 말이다. 황교안의 돌출적 제안은 그런 대처가 선거에서 역효과를 내고 있음을 뒤늦게 깨달았음을 뜻한다. 물론 이 제안에 서민을 위한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순 없다. 문재인이 거듭 대폭 지원, 보편 지원에 반대하는 것 때문에 황교안이 반사이익을 노리고 역제안을 한 것이다.

## 둔감

코로나19가 총선의 핵심 쟁점이 됐다고 해서, 선거 결과가 곧 가장 효과적이고 우수한 대안을 낸 세력에게 자동으로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대중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영향과 (그로 말미암아 제약 받는) 자신감 때문에 현실적 가능성(공약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당선 가능성)을 우선적인 투표 기준으로 삼는다. 사람들은 진보·좌파의 대안이 맘에 들더라도 소수 정당들이고 당선이 어렵워서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선택지(투표)에서 빼는 경향도 적지 않다.

이번 선거에 나간 진보정당들은 대부분 노동계급에 피해가 집중되는 현실을 고발하며 노동계급과 서민에게 당장 필요한 지원 대책과 공공의료(병상, 인력) 투자 확대를 공약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주민도 포함해 모든 개인



누구를 구할 것인가

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요구를 반대하고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코로나19 위기의 긴급성과 보편성이 비춰 보면 매우 둔감한 상황인식이다.

문재인 정부의 3년 중간평가 성격이 있는 총선이므로 총선 관련 여론 추이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평가와도 밀접하게 연동돼 왔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기 오래 전부터 지지율 하락 위험에 처해 있었다. 개혁 배신에 대한 실망, 조국의 특권을 응호한 위선과 평등의식 결여에 대한 대중적 분노 때문이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방역 실패가 2월에 주가됐다. 코로나 방역 강화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면 방역 조치 3주 만에 긴장된 태세를 풀자고 대통령이 선불리나섰다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왔다.(신천지 공격은 이 과정에 편입되는 책임전가이자, 주의를 끈 데로 돌리는 전술이었다.)

이때만 해도 통합당 지지율이 반사이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였다. 총선 패배를 막으려고 정부는 대구 지역에 방역(확진자를 찾아내려는 검사와 이동 억제)을 집중했다.(이를 용이하게 하려고 신천지 마녀사냥에 나섰다. 물론 괴씸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3월 중순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에서 코로나19 감염 폭발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이탈리아·스페인·영국·일본 등지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규모가 중국(중국 정부의 사망자 발표 규모를 믿을 수 있다면)이나 인접국 한국의 수개월치를 순식간에 훌쩍 넘겨 버렸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가 방역 대책을 잘하고 있다는 착시적 분위기를 언론을 통해 조성할

수 있었다.

반대로 통합당은 코로나19 대책에도 성의를 안 보이더니, 선거 돌입 직전에 막말 친박 출신인 민경숙, 용산참사 주책임자 김석기 등이 공천에서 살아나고 연이은 막말 소동이나 벌였다. 통합당이 말로만 떠들고 긴급 재난 지원을 반대한 것과 달리,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은 빠르게 긴급 재난 지원 성격의 보조금을 지출하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통합당은 4월 8일 김대호, 차명진 두 막말 후보를 제명해 총선 후보직을 박탈하겠다고 발표했다.

통합당의 헛발질이 제살 깎아먹고 있다 해도 여전히 민주당의 코로나 생계 지원 방안은 미흡하다. 황교안의 제안이 인기를 얻을까 봐 다급하게 여권도 당대표 이해찬이 나서서 전 국민 지원으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액수는 황교안의 제안만도 못하고, 지급 시기도 분명히 약속하지 않고 있다.

## 차별화

노동운동과 진보진영 주류의 초기 대응에도 약점이 있었다. 정의당과 민주노총 등은 발병 초기에 계급을 초월하는 범국가적 위기이므로 위기 대응을 위한 전사회적·범국민적 단합에 함께하겠다는 식이었다.

전광훈과 우파 개신교가 괄사나워도 민주노총 지도부와 진보정당들이 정부와 서울시의 도심 집회 금지 자체에 찬성하거나 협조한 것은 과오였다. 또, 민주당 이해명·김경수 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는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오히려 반대했다. 이미 2월부터 코로나19를 평계로 한 해고와 임금 삭감 공격, 안전·방역 미흡과 차별 사태들이 불거지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정의당은 3월 하순에 가서야 비로소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해 정부·여당과의 차별화를 강화했다.

한국은행의 4월 8일 발표를 보면, 올해 3월 기업과 가계 모두 은행 대출이 증가했다. 부동산 호경기도 아닌데 가계 대출이 2월, 3월 모두 약 10조 원씩 증가했다. 시사적이다. 기업 대출도 증가했는데, 눈에 띄는 것은 대기업의 대출이 10조 원 넘게는 것이다.

장기 침체 상황에서 투자에 소극적이 되면서 대기업들은 지난 1~2년 새 은행 대출을 급격히 줄여 왔다. 그런데 한 달 동안 대기업 대출이 10조 원 넘게 늘었다. 투자가 아니라 긴급 운영 자금일 것이다. 생산, 매출이 줄어도 고정 지출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황이 워낙 다급하기 때문에 복지에 돈 풀다가 살림 거덜 난다는 우파의 반박 논리는 큰 반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대중은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 박근혜 정부가 무능하기 짜이 없는 대응을 한 것을 기억한다. 그들의 상당수는 박근혜가 대중의 질타를 받자 상황실에 “살려야 한다” A4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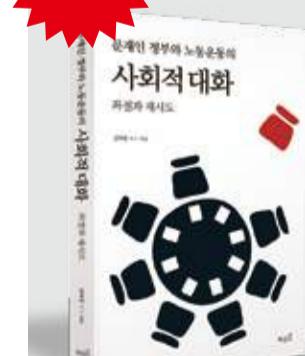
지를 붙여 놓고 쇼를 한 것도 기억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A4가 아니라 현금 살포를 해서라도 가족과 개인들의 생계 살리기를 바란다. 주류 양당이 뒤늦게 공약 경쟁을 하는 듯하지만, 대중의 불만과 요구가 더 강력하게 표출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득표를 위한 말 대결 이상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기업주들과 정부 관료들이 막대한 기업 지원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불안감에서 소득 지원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가 일으킨 고통에 더해 경제 위기로 인한 사용자 측의 공세가 강화될 조짐이다.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가중되는 만큼 선거 공간에서도 이 문제에서 차별화된 정부 비판과 진보적 대안이 공론화돼야 한다.

▶ 관련 기사 2면

## 신간



##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

좌절과 재시도

김하영 쓰고 엮음, 책갈피, 228쪽, 12,000원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황교안 등: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 책임자들의 낙선을 바란다
-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온전한 낙태 권리 향한 여정이 남아 있다

코로나19 수도권 감염 '폭발' 경고에도

# 기업 이윤 보호하려 위험 방지하는 문재인 정부

## 장호증 의사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40~50명대로 줄어들자, 방역에 대한 안도감이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물론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다. 이대로라면 사망자 증가세도 둔화하고 환자·격리자의 수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것이 불확실하다.

현재 각국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예측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초기와 많이 달라졌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기존 입장을 바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것도 이와 관련 있다. 처음에는 무증상 감염자

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력 평가도 크게 수정됐다.

지금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들(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는 치명률이 급증하고 있다. 보건의료체계의 붕괴 때문에 사망자가 더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치는 현재 이탈리아(12.6퍼센트), 영국(11.1퍼센트), 스페인(9.9퍼센트), 프랑스(9.5퍼센트) 등지에서 사스의 치명률(약 11퍼센트)에 가까워지고 있다. 1차 방역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과 독일에서도 어느새 치명률이 1.9퍼센트를 넘었고, 세계 전체로도 계속 높아져 6퍼센트에 근접하고 있다. 이 수치는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동안 제시된 예측이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보듯, 정부의 고강도 거리 두기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 추세는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이 '폭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구에서 벌어진 일이 인구가 10배쯤 많은 수도권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병상과 인공호흡기 등을 마련해 두라고 조언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구로 콜센터 노동자의 가족이 최근 사망한 것에서 보듯 위험은 여전히

다. 병원 등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도 현재진행형이다. 수도권에서만 여전히 1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자가 격리 상태에 있고, 강남의 유흥업소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타나는 등 불안 요소는 너무나 많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인구의 대부분이 면역력이 없는 상태인데도 그중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일터에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방역을 완화하는 시기와 방안만 찾고 있다. 코로나19와 함께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이윤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도 대중의 생계보다는 기업 경영 지원에 치중된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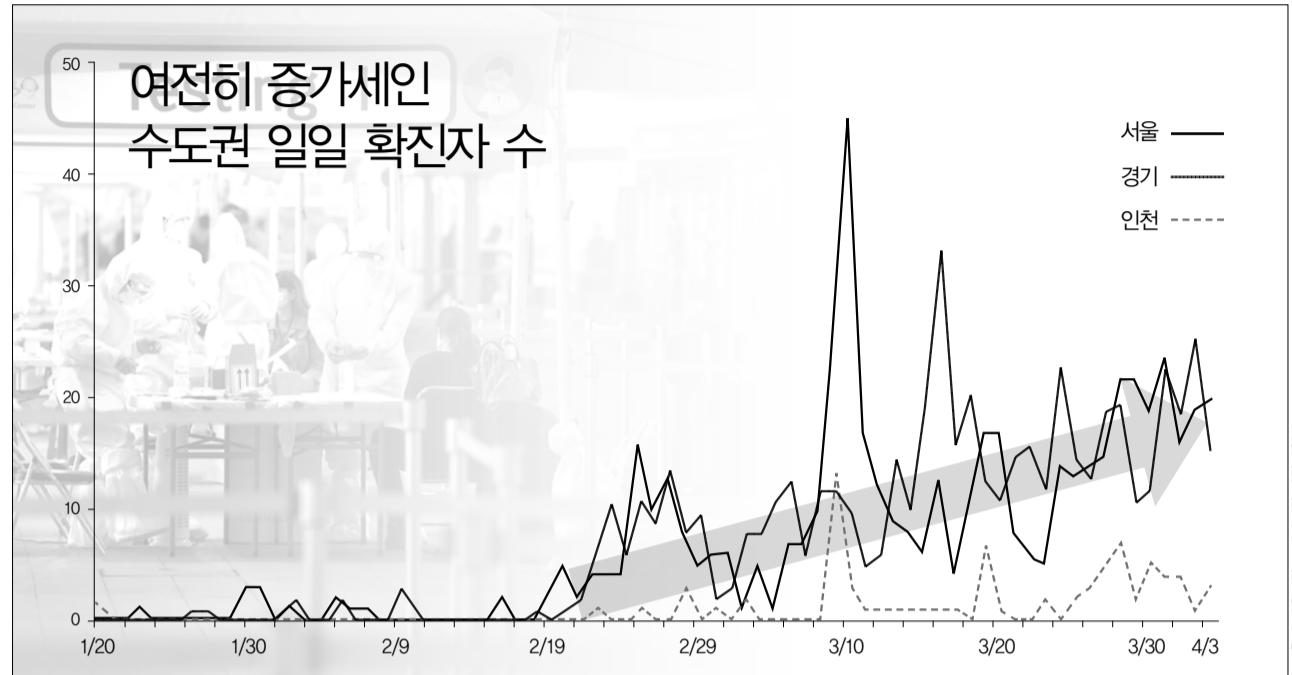
예를 들면, 4월 8일 열린 4차 비상경제 회의에서는 이번 달부터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에서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공제율을 80퍼센트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했고, 흥남기 부총리는 "소비 등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조처를 발표했다.

대구에서 환자가 급증하기 전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그러니 정부와 언론들이 야외 나들이와 외출을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인 테다 별 효과도 보지 못할 것이다. 아침저녁으로 미어터지는 대중교통 수단을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주말 공원 나들이를 걱정해야 할까?

지금 필요한 것은 거리 두기 완화 시기와 방식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비필수 업무들에 대한 휴업 명령 등 제대로 된 방역 지침을 내리는 것이다. 의심 환자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자가 격리를 최소화하고 병원 등에 입원해 경과를 관찰하도록 해야 한다.

대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면 마땅히 이뤄져야 할 조처를 문재인 정부가 끝내 회피하는 것은 그들의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때문에 총선이 지나면 이윤을 보호하는 데 나서야 한다는 유혹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앞으로 노동자들에게는 코로나19 감염병만큼이



나 치명적인 조처들 — 해고, 무급 휴직 등 — 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노동자들도 이에 맞선 투쟁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이번호 기사 '현대차 2차 하청 노동자들, 임금 삭감 반대해 파업', '광양항 화물 노동자: 항만 봉쇄 파업으로 통쾌하게 승리하다'를 보시오.)

방역 완화 기회만 살피는 문재인 정부는 애먼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제는 별 의미도 없는 입국 통제나 전자팔찌 등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을 도입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양새를 보이려 하고 있다.

## 전자팔찌 등 권위주의적 통제에 의존하는 정부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의 외출 사례가 거듭 보고되자 정부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 때문에 몇 분 동안 놀이터에 다녀온 여성은 경찰에 고발하고, 집 밖에 나갔다는 이유로 외국인을 강제 추방하는 등 지나치게 강경한 조처들이 이어지고 있다. 구속 수사 얘기까지 나온다.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해 효과를 보려는 속셈인데, 효과는 없고 애먼 피해자들만 생길 가능성이 크다. 정작 막아야 할 큰 구멍 — 일터와 대중교통 등 — 은 열어 둔 채 작은 구멍들만 틀어막으려는 식이기 때문이다.

자가격리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려는 시도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피해자를 모조리 범죄자 취급하는 조처다. 그동안에도 문재인 정부는 특정 종파 마녀사냥이나 (불필요한) 확진자 동선 공개 등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을 사용해 왔다. 이라고서 '민주주의적'으로 감염병을 통제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꼴불견이다.

자가격리자들의 외출을 줄이고 감염 확산을 통제하려면 권위주의적 통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장기간 집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적지 않

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 준다. 2주간 아이를 데리고 집 안에만 있으라고? 영국 등지에서는 외출금지령이 계속되면서 가정 폭력이 늘어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그 기간의 생계 비용도 문제다.

따라서 정부가 격리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병원이나 각종 시설 등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주들에게는 100조 원 넘게 펴 줄 정도로 후한 문재인 정부가 그 절반만이라도 평범한 서민층 가정에 제공한다면 격리 조처를 어길 사람은 크게 줄 것이다.

## 재난기본소득 — 경제가 아니라 생존 위해 필요하다

뒤늦게 그것도 국민의 70퍼센트에게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불만이 커지자, 여야가 한목소리로 재난 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일 테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 국회에서 정하자니 선거에서 패배한 쪽이 약속을 지킬지도 미지수다. 지금 대상뿐 아니라 액수와 기간도 문제다. 몇 달 동안 소득이 없는 이들에게 고작 한 차례 30만~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이 될

수 없다. 그야말로 재난 상황에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못마땅해하는 목소리도 있다. 부자들에게 지급하면 가난한 이에게 돌아올 액수가 준다는 우려 때문인 듯하다. 그런데 이는 위기의 수준을 간과한 물음이다. 밑바닥 서민 층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와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국가가 노

동자·서민을 구제하는 일에 나서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되레 온건 개혁파의 문제의식(경제 회복 효과 없이 재정 적자만 커진다는 우려)과 연결된다.

좌파적인 재난기본소득 요구는 훨씬 더 높은 액수를 요구하며, 그것을 위해 정부 재정을 추가로 대폭 투입하라고 주장한다(재정 적자 감수).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긴급한 생계상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니 이런 요구는 정당하다. 이런 접근법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요구가 무급

휴직이나 해고 등으로 절박한 생계 위협에 놓인 노동자·서민에 대한 지원 요구와 대립될 이유가 없다.

생계가 위협받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돈을 받는 게 못마땅할 수는 있지만 그 때문에 당장 필요한 현금 지원을 삼가는 것도 이상하다. 충분한 액수를 보편적으로 주어짐으로써 노동자·서민들은 권리로서 재난수당을 지급받고 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마치 무상급식처럼 말이다.

선별 지급은 기준 마련에 시간이

걸리고 혼선을 자아내며,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까지 걸러내는 부작용이 있다. 게다가 국가가 수급자들을 나오자 취급하며 통제하는 효과를 낸다.

현재의 위기는 체제 안정화를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노동계급의 삶을 지키려면 긴급한 필요에 대한 요구를 제시함과 동시에, 사회 운영의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던져야 한다.



## 현직 대형병원 간호사가 전하는 코로나19 방역 제일선의 실상

유혜린 서울성모병원 간호사

내가 일하는 병원은 1200병상이 넘는 서울 강남의 대형 대학병원이다.

최근에 내가 일하는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작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고용간병인 없이 간호 인력이 입원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서비스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노인 인구가 늘고 간병비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대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확대돼 왔다. 메르스 사태 이후에는 감염병을 막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동'이 필요하다는 여론 덕분에 더 확대됐다. 정부 지원으로 중소 병원부터 점차 확대되다가 2~3년 전부터는 대학병원들도 간호간병통합병동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내가 일하는 병동도 일반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바뀌면서 간호 인력이 갑절 가까이 늘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12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보조인력도 생겼다. 일반 병동에서는 하지 않던 업무들이 늘어나긴 했어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더욱 안전하게 환자를 간호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우리 병원의 1200병상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고작 200병상에 서만 시행된다. 나머지 1000병상은 여전히 인력이 부족해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일하기 힘들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더 신속히 확대돼야 한다.

병원의 인력 부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간호 인력이 간병인과 보호자의 감염 여

부까지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이 열이라도 나면 혹여나 코로나 감염 일까 봐 간호사들은 노심초사한다.

### 살얼음판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입원을 통제하다 보니 얼마 전에는 환자 수가 조금 줄기도 했다. 하지만, 부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다시 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반 병동 입원 환자는 상주하는 보호자가 한 명만 허용된다. 보호자가 교대할 수도 없다. 보호자도 최대한 외부 접촉을 자제하고 퇴원까지 병원 안에 있어야 한다. 이 조처에 따를 수 없다면 간병인을 써야 하고 간병인이 있으면 보호자의 환자 면회는 제한된다.

인력 부족 때문에 보호자와 간병인을 내보내지도, 충분히 허용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만큼 간호 인력이 있다면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훨씬 효과적으로 환자와 보호자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직장에 나가거나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평범한 노동자·서민은 가족을 돌보느라 병원에 상주하는 것이 대단히 큰 부담이다. 그러나 간병인을 고용하면서 하루 간병비만 7~10만 원이나 든다.

코로나19로 병원 인력 확충이 얼마나 필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근무하는 동료 간호사들에게 고마운 마음마저 든다.

노동강도가 높기로 유명한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매일 수시로 바뀌는 업무 매뉴얼과 간호 인력 충원 없는 환자 관리 규정 강화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감염병 노출 위험에 대한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환자가 언제 발생할지 몰라 병원 전체가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선별진료소가 있지만 응급 수술이나 시술을 해야 하는 중증 환자들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엑스레이와 폐 CT 검사가 필수다.

그런데 이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증 환자를 수술실이나 중환자실로 보내지 못하고 대기시켜야 하니 상태가 악화될까 봐 우려스럽다. 응급실에 온 폐렴 의심 환자의 경우 음압 격

리실이 부족해서 격리할지 말지, 검사는 언제 어떻게 할지 혼란스러운 상태다. 그나마 메르스 경험 덕분에 규정 등이 많이 개선된 게 이 정도다.

병원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병원 규정이 자주 바뀌고 강화되고 있다.

65세 이상 환자들은 의사 판단에 따라 엑스레이를 찍거나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입원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그 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규정이 바뀌어 진료를 받거나 입원해야 하는 환자 모두 안심진료소나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야만 진료와 입원을 할 수 있다.

### 인력·시설·장비 확충

그런데 검사는 의무화하고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는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병원 내 전파를 막겠다며 전수조사를 하는 상황에서 이는 부당하다.

병원마다 방어 대책도 다르고 검사비 부담 여부도 각기 다르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국가나 병원이 비용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려면 병원들이 의료 인력을 늘리고 의료 시설과 장비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간호사들이 인력과 의료장비 부족에 항의해 시위를 하고 있다. 독일의 간호사들은 코로나19 사태 동안 위험수당과 초과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한다.

한국의 병원 노동자들도 이런 요구를 해야 한다. 선진국이라면 유럽과 미국의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의료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한국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한국의 보건의료 노동자들도 문재인 정부와 병원에 제대로 된 대책과 준비를 요구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지금 과는 다른 의료시스템, 무상 공공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

트럼프, 코로나19에도 "직장에 나가라"

##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거부하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조업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려고 작정했다. 사람 목숨을 얼마든 대가로 치러서라도 말이다.

4월 4일 트럼프는 기자회견에 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인들이 "일터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생각해 봐라. 사람들에게 일하려 가지 말라고 돈을 주고 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트럼프가 이런 잔혹한 말을 한 것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공중보건국장 제롬 아담스가 이렇게 말한 다음이었다. "진주만 공습 같은 9·11 테러 같은 시기가 올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지역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 현상이 될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만 코로나19로 1만 명 넘게 사망했다.

몇몇 부문에서 노동자들이 반격에 나서고 있다. 매사추세츠주(州)에서는 1만 명 넘는 건설 노동자들이 작업장 안전 문제로 4월 6일 파업 돌입을 계획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건설 노동자 연합(NASRCC) 노조 위원장 톰 플린은, 일부 건설 현장에는 안전 조처를 지키기 위해 "실질적 강제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뉴욕시 스탠퍼드아일랜드에 있는 아마존 물류창고 노동자들은 3월 30일에 직장 이탈 파업을 벌였다.

"확진자가 몇 명 나왔냐고? 열 명이다!" 파업 노동자들이 외친 이구호는, 동료 노동자들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일컬은 것이었다.

4월 2~3일에는 디트로이트 시에서도 파업이 벌어졌고, 아마존 시카고 지사에서도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3월 30일 식료품 배달 업체 인스타카트 노동자 15만 명가량이 바이러스 전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직장 이탈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4월 1일 물류 대기업 XPO가 펜실베니아주 팔미라시에서 운영하는 허시사(社) 식료품 포장 공장에서도 노동자 수십 명이 직장 이탈 파업을 벌였다.

4월 2일 콜로라도주 그린리에 있는 육류 가공기업 JBS 미국 공장의 노동자 약 900명이 병가 파업을 벌였다.

공장 노동자들 중에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뒤 이날 행동이 벌어졌다. 이 공장 노동자들은 대개 이주노동자들이고 공장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만 27가지다. 그러나 이 노동자들은 안전 조처가 턱없이 모자란 것을 규탄하며 하나로 뭉쳤다.

4월 3일 <뉴욕 타임스>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다 "물리적 거리 두기" 지침에 훨씬 더 쉽게 따를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데이터를 보면 소득 수준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이동량이 줄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특히 평일에 집에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거의 모든 주에서 부유층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며칠 더 빨리 이동량을 줄일 수 있었다. 그 때문에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전에 물리적 거리 두기를 할 수 있었다.

많은 대도시들에서 부유한 상위 10퍼센트의 이동량은 사실상 0으로 줄었다.

그러나 하위 10퍼센트는 주말에는 이동량이 0에 가깝게 떨어졌지만, 평일이 되면 다시 치솟았다.

카이저가족재단(KFF)이 발표한 보건 추적 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 57퍼센트가 직장에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처지라서 바이러스에 노출될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연 소득 4만 달러 [한화 약 4800만 원] 이하 층에서 그 비율은 72퍼센트까지 올라갔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카> 269호 / 번역 김준호



인력·의료장비 부족 항의 시위 중인 미국 간호사들



"노동자들을 보호하라!" 동료들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휴업하지 않자 파업에 나선 아마존 노동자들

# 여성, 가족,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사라 베이츠

“집 밖에 나오자 말고 생명을 살려라.” 이 지침의 의미는 명백하다. 가만히 있는 것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핵심 전략이라는 것이다.

불건을 사라 가거나 운동하라 나가는 것을 제외하면 대다수 사람들에게 가만히 머물 곳은 집뿐일 것이다.

외출 제한령 하에서의 삶은 허허 잠 웃 바람으로 화상회의를 하거나 오랫동안 미뤄뒀던 취미 활동을 하는 일상적인 휴식처럼 제시된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외출 제한령이 내리면 부자들은 집 앞까지 배달되는 유기농 채소를 주문하고 유급 간병인을 불러 몸이 약한 친척들을 확인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암도 다수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적인 작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서 생생하게 확인하고 있다.

또, 노동계급 여성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 뛰어들어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다.

여성단체 ‘곤경에 처한 임산부들’ (Pregnant Then Screwed)의 설립자 조엘리 브리얼리는 이렇게 말했다. “이 번에도 위기를 버티기 위해 [희생된 것은] 무보수 노동을 떠안은 여성들이었다.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재택 근무를 하라고 하지만, 아이가 있는 여성들에게는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다. 임신한 여성들을 아무런 절차 없이 해고하고, 그렇지 않은 임산부에게는 일터로 나와 일할 것을 강요했다.”

이스트린 지역 중등학교 교사인 폴린은 외출 제한령 때문에 “삶이 엄청 나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결국 하루에 교대근무를 두 번 뛰는 끝이 됐습니다. 낮에는 두 아이를 가르치고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직장 일을 합니다.”

“부모에게는 정말 힘겨운 상황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집에서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경력 교사인 저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하는 제 남편은 재택 근무를 하지만 회사는 근무 시간 단축을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누가 양육을 떠맡을지를 전적으로 회사가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해요. 한 부모 가정은 어떻게 견디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운영을 맴둔 것은 학교만이 아니다. 도서관, 어린이집, 급식소, 엄마 모임, 방과후 활동, 청소년 클럽 등이 모두 운영을 멈췄다.

지난 10년 간 긴 기록 때문에 누더기가 된 공공서비스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이 더한 층 쪼들리고 있다.

위기가 오자 공공서비스 종단의 후폭풍은 부모들에게 떠맡겨졌다.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코로나19 때문에 부모들은 양육을 전적으로 절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점점 더 크게 느낄 것이다.

부모가 무한정 보살핌과 관심을 베풀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은 거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양육이 가족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가족은 계급 사회가 굽러가게 하는 데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다.

일상적으로 사회에 필요한 물품 대부분은 여성의 무보수로 수행된다.

여기에는 대부분 자녀 양육이 포함된다. 나이든 친척 등 다른 가족을 돌보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상황은 남성과 여성의 타고난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이 사회가 조직된 방식의 산물이다. 예컨대 육아휴직 관련법에 따른 휴직 기간은 여성에게 더 많이 주어진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성의 양육을 더 많이 맡는 것이 합리적이게 된다.

영유아 양육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성은 집에 머물게 하여 아이를 돌보기 하는 것이 전제로 일자리로 복귀시키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타당해진다.



어린이집 휴원 등 공공서비스 중단의 후폭풍은 노동계급 여성들의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 입법감

자녀가 학교에 입학해도 — 학교는 국가가 양육에 기여하는 몇 안 되는 요소의 하나다 — 보호자들은 학기 중이 아닐 때, 잘 때, 하교하는 아이들을 데리러 갈 때 아이들과 같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은 육아휴직 이후에 복직해도(대부분 여성들이 그럴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나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할 가능성이 더 높다.

여성 고정관념은 체제가 여성의 가사노동에 의존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집 밖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현재 집에 있는 자녀를 교육할지 직장에 나갈지 선택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임금이 적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빚어나기 어려운 노동계급 여성들은 자가 경력 같은 조처에 훨씬 큰 타격을 받는다.

국민보건서비스(NHS) 인력의 약 77퍼센트가 여성이다. 소매업 노동자 약 3분의 2도 여성이고 청소 노동자 대다수도 여성이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시기에 매우 중요한 일들이다.

정부는 여성이 그런 일자리에서 이탈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이 여성들이 근무 시간을 더 늘리기를 바란다. 정부는 사실상 여성들이 계속 일터에서 일하면서 가정에서도 더 많은 부담을 자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여성의 가정에서 똑같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부유한 여성들은 노동계급 여성은 고용해 요리나 청소, 양육을 맡길 수 있다.

여러 불균등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는 동안 더 심해질 것이다.

비좁은 단칸방에서의 외출 제한과 호화로운 복제에서의 외출 제한 사이에는 커다란 격차가 있을 것이다.

외출 제한이 뜻하는 바는 자녀가 컴퓨터를 쓸 수 있는지, 심지어는 뭔가를

청소하는 것이 여성의 “자연스런” 구실로 여겨지는 데에 있다.

여성은 누군가를 보살피는 본성을 태고난다는 시각은 자제계급에게서 나온 것이다. 때로는 몇몇 페미니스트들

도 그런 시각을 드러낸다.

그러나 남성이 폭력적이거나 대담한 기질을 생물학적으로 태고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은 육아휴직 이후에 복직해도(대부분 여성들이 그럴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나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할 가능성이 더 높다.

여성 고정관념은 체제가 여성의 가사노동에 의존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집 밖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현재 집에 있는 자녀를 교육할지 직장에 나갈지 선택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로 여성들의 양육과 가사 부담이 더 커진 동시에, 여성들이 집 밖에서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순이 벌어진다.

여성 고정관념은 체제가 여성의 가사노동에 의존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집 밖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현재 집에 있는 자녀를 교육할지 직장에 나갈지 선택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여성 고정관념은 체제가 여성의 가사노동에 의존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집 밖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현재 집에 있는 자녀를 교육할지 직장에 나갈지 선택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여성 고정관념은 체제가 여성의 가사노동에 의존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집 밖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현재 집에 있는 자녀를 교육할지 직장에 나갈지 선택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여성 고정관념은 체제가 여성의 가사노동에 의존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집 밖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현재 집에 있는 자녀를 교육할지 직장에 나갈지 선택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여성 고정관념은 체제가 여성의 가사노동에 의존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대고 쓸 책상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대형 매장에서 일하는 ‘0시간 계약’

[호출 노동] 여성 노동자의 경험과 집에

서 인력하게 업무를 보며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를 강 건너 불보듯 구경하는

여성 CEO의 경험은 천지차일 것이다.

가족이 다음 세대 노동자를 배출하는 핵심 제도이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에게 거의 아무 비용도 물리지 않은 채 부모에게 자녀 양육을 맡기는 것이 사장들과 정부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아이들이 적당한 교육과 보건, 사회화를 통해 생산적인 노동자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폭력적 사회주의자들이 자녀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는 것을 해법으로 여긴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진정한 해법은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무보수로 수행되는 노동을 집단적·사회적 영역으로 옮겨오는 것이다.

여자는 전제 사회, 남성과 여성 모두의 문제여야 한다. 요리나 빨래 같은 가사노동은 집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그러면 여성들이 아무런 인정과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가정에 수십 년을 바쳐야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로 취급되고 보수도 형편 없던 소위 “여성의 일”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로 대접받게 될 것이다.

여자는 전제 사회, 남성과 여성 모두의 문제여야 한다. 요리나 빨래 같은 가사노동은 집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여자는 전제 사회, 남성과 여성 모두의 문제여야 한다. 요리나 빨래 같은 가사노동은 집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여자는 전제 사회, 남성과 여성 모두의 문제여야 한다. 요리나 빨래 같은 가사노동은 집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여자는 전제 사회, 남성과 여성 모두의 문제여야 한다. 요리나 빨래 같은 가사노동은 집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여자는 전제 사회, 남성과 여성 모두의 문제여야 한다. 요리나 빨래 같은 가사노동은 집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여자는 전제 사회, 남성과 여성 모두의 문제여야 한다. 요리나 빨래 같은 가사노동은 집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냉혹한 세상에서 우리는 애정과 도움, 유대를 가정에서 경험할 때가 종종 있다.

그렇다 해도, 완벽하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이상은 사회 폐기로부터 강요되는 것이다.

가족이 다음 세대 노동자를 배출하는 핵심 제도이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에게 거의 아무 비용도 물리지 않은 채 부모에게 자녀 양육을 맡기는 것이 사장들과 정부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아이들이 적당한 교육과 보건, 사회화를 통해 생산적인 노동자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폭력적 사회주의자들이 자녀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는 것을 해법으로 여긴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진정한 해법은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무보수로 수행되는 노동을 집단적·사회적 영역으로 옮겨오는 것이다.

여자는 전제 사회, 남성과 여성 모두의 문제여야 한다. 요리나 빨래 같은 가사노동은 집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여자는 전제 사회, 남성과 여성 모두의 문제여야 한다. 요리나 빨래 같은 가사노동은 집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여자는 전제 사회, 남성과 여성 모두의 문제여야 한다. 요리나 빨래 같은 가사노동은 집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여자는 전제 사회, 남성과 여성 모두의 문제여야 한다. 요리나 빨래 같은 가사노동은 집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여자는 전제 사회, 남성과 여성 모두의 문제여야 한다. 요리나 빨래 같은 가사노동은 집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여자는 전제 사회, 남성과 여성 모두의 문제여야 한다. 요리나 빨래 같은 가사노동은 집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여자는 전제 사회, 남성과 여성 모두의 문제여야 한다. 요리나 빨래 같은 가사노동은 집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여자는 전제 사회, 남성과 여성 모두의 문제여야 한다. 요리나 빨래 같은 가사노동은 집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여자는 전제 사회, 남성과 여성 모두의 문제여야 한다. 요리나 빨래 같은 가사노동은 집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여자는 전제 사회, 남성과 여성 모두의 문제여야 한다. 요리나 빨래 같은 가사노동은 집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 프랑스

# 마크롱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제에 노동자들이 반발하다

마리 펠테스

프랑스는 코로나19에 대응해 강력한 국가 권력으로 집행되는 엄격한 외출 제한령 하에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회 활동 대부분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그 방식은 가혹하고, 계급적인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다.

격리 방침을 위반하거나 이유 없이 외출하면 벌금 135유로(약 18만 원)를 내야 한다. 그 후 15일 이내 한 번 더 이를 위반하면 벌금은 1500유로(약 200만 원)으로 된다. 30일 이내에 4번 위반하면 3700유로(약 490만 원)의 벌금형과 최대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총격적 영상들이 온라인에 유행했다. 경찰이 기본적인 보건 지침을 모두 무시하고서 코로나19 의심환자로 확인된 사람들을 한 대 불잡아 놓은 장면을 담은 것이다. 경찰은 3월 17일 하루에만 총 50만 파운드(약 7억 5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 법을 권리 단체에 따르면, 다음 날 “적어도 5명이 자가 격리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유치장에 갇혔다.”

코로나19 위기 초기 국면은 마크롱을 부상시켰다. 한 여론 조사에서 프랑스인 3분의 2가 마크롱의 첫 연설이

마크롱 정부가 지지하는 후보자인 진진하는 공화국당의 아내인 베방은 18퍼센트를 득표해 3위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유럽의회 선거에서 이 당이 얻은 득표율의 절반 수준이다.

더 중요한 것은 비필수 산업임에도 출근을 하는 노동자들의 저항과 분노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항공기·열차 제조업체 블바디어, IT 기업 캡제미니, 자동차 부품업체 날로레, 제너럴 일렉트릭, 자동차 제조업체 PSA(푸조르트로트로), 자동차 제조업체 르노, 군수업체 르노트르에서 파업이 벌어져 사장들은 생산을 중단해야만 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조업 중단은 아르장퇴유 지역의 다소 항공에서 벌어졌다. 이곳에서는 그들이 경찰에 저항하면서 출근

# 코로나바이러스와 자본주의 위기

조셉 추나라 영국의 반자본주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

카를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가장 근본적인 층위에서 자본주의는 순환을 기반으로 한다. 자본가들은 자본을 이용해 원자재·설비·노동력을 작업장에 끌어모으고는 노동력을 착취해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낸다.

자본가들은 재화와 서비스를 다른 자본가나 노동자에게 판매해 이윤을 내고 자본을 증식하려 한다. 그런 다음에는 더 많은 원자재와 설비를 구입하고 더 많은 노동력을 고용해 이 과정을 반복한다.

어느 곳에서든 그 이유가 뭐든지 간에 이 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면 위기가 터진다.

이번 코로나19가 일으킨 충격을 보자. 모든 나라에서 노동력의 활동이 제한됐다. 원자재·설비·공급에 지장이 생겼다. 많은 재화·서비스의 판매가 멈추다시피 했다.

이번 충격의 진원지는 중국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전자제품 제조 등의 분야에서 세계 생산망의 중심지로 부상해 왔다. 그래서 중국발 충격은 이제 세계경제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세계경제의 구성 요소들이 신용 사슬로 엮여 있어서 그 타격은 훨씬 심각해진다. 모기지·대출·신용카드 등 의 형태를 띤 소비자 부채 규모도 방대하지만 기업들도 서로 돈을 빌려 주고,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고, 금융시장에 직접 투자해 왔다.

예컨대 “기업어음” 시장 규모는 1조 달러가 넘는다. 기업어음이란 기업들이 일상적 영업에 쓸 돈을 금융시장에



서 단기간(보통 며칠에서 몇 주) 빌려 발행하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이런 금융시장을 얼어붙게 했다. 요즘 같은 때에 누가 어느 기업에 돈을 빌려 주려 하겠는가? 이런 시장들이 수축하면 자본주의의 원활한 작동에 필요한 자금이 씨가 마르는 “신용 경색” 위험이 생긴다.

경제 위기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때마침 유가 전쟁을 단행하는 바람에 더 심각해졌다. 그전까지는 산유국들이 석유 공급량을 제한해 유가를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데에 합의해 온 덕택에, 상대적으로 비싼 미국

세일 원유 생산이 한동안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있었는데 말이다.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과 유가 전쟁이 만나면 언제든 세계경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심각한 세계 경기 침체를 촉발한 것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진행된 장기적 과정 때문이다.

2008~2009년에 닥친 지난번 대규모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 전반에서 이윤율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투자 수준이 부진한 결과 벌어진 것이다. 1980년대부터 자본주의 체제는 신용 확대에 크게 의존해서 작동했다.

그 결과 원자재, 주택, 첨단 기술 기업 주식 등 여러 번 거품이 생겼는데,

그 밑바탕에는 거대한 신용 거품이 있었다.

2008년은 이런 식의 확장이 한계에 이른 해였다. 위기는 거품 하나 — 손실 위험이 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 — 가 터지면서 시작됐지만, 과잉 확장된 금융 시스템 곳곳으로 순식간에 번졌고 경제 전반을 침체로 끌고 들어갔다.

과거에 경제 위기는 수익을 못 내는 기업들을 정리해 이윤율을 반등시키고 급격한 경기 확장을 재개할 가능성을 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경제에 개입했다.

이들은 경기 부양책을 펴고 은행을 인수하고, 중앙은행이 유동성[자금]을 풀기 위해 금융 기업에게서 자산을 매입하는 양적완화를 시행하고, 금리를 이례적으로 낮췄다.

이런 조처는 경제가 추락하는 것을 막았지만 낮은 이윤율이라는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십 년 동안 투자 수준과 생산성 향상이 저조했다.

설상가상으로 양적완화와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 정책 때문에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했다. 시장으로 풀려 나온 신용 상당 부분이 손실 위험이 높고 투기적인 활동에 쓰였고 주

## 코로나19와 심각해지는 실업난

### 해고 중단하고 임금·고용 보장하라

#### 정선영

코로나19와 함께 급증하는 해고로 전 세계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3월 셋째~넷째 주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무려 1000만 명이 됐다.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르게 실업이 증가한 것이다.

최근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올해 4~6월 코로나19로 실직 위기에 처한 인구가 최소 2730만 명에서 최대 668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평균 4705만 명인데, 이 예상대로라면 미국 경제 활동 인구 3명 중 1명이 실업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1930년 대공황보다 더욱 심각한 수치이다.

중국 선전탄왕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중국은 경제가 봉쇄된 올해 1~2월 실업자가 2억 명에 달한다. 영국에서

특히 아랍 국가들에서는 총 노동시간이 8.1퍼센트 감소해 감소폭이 가장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국의 실업 증가

한국은 중국이나 서구처럼 강도 높은 이동 통제를 시행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를 보면, 3월 실업급여 신청자가 19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퍼센트 늘어났다.

직장갑질119도 상담 사례 중 해고·권고사직 관련 건이 3월 첫째 주 8.5퍼센트에서 넷째 주 27퍼센트로 3.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초반에 무급휴가와 연차를 강요 하던 추세에서 점차 해고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에서 구조조정 피바람이 불고 있다. 이미 인천에 있는 대한항공 기내식 협력업체는 직원 1800명 중 2억 명이 실직하는 효과를 낼 것이고,

1000명을 해고(권고사직)했다. 나머지 800명 중 300명도 휴직 상태이다. 대한항공에서 기내 청소를 담당하는 이케이맨파워도 계약직 직원 52명을 해고했다.

하청업체들에 이어 대형 항공사의 구조조정도 벌어지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 직원들은 지난달 10일씩 순환 무급휴직을 한 데 이어 이번 달에도 15일씩 순환 무급휴직을 한다. 대한항공도 4월 중순부터 6개월간 전 직원의 70퍼센트에 달하는 인원이 3~4개월씩 순환휴직을 하기로 했다.

이스타항공은 직원 300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2월 중순에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임금 25퍼센트 삭감에 합의했다. 그러나 사측은 약속을 어기고 2월 임금을 40퍼센트만 지급했고 3, 4월 임금은 주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여기에 해고까지 추진한 것이다. 사측은 애초 직원 1600명 가운데 700명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했다가 반발이 일자 300명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안타깝게도 노조는 해고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급여 추가 반납과 무급휴직 등을 통해 추가적인 “고통 분담”을 하기로 했다.

앞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 기업 부실과 이로 인한 노동자 구조조정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코로나 사태 전인 지난해 한국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그 전년도에 비해 반토막 나는 등 진작에 기업 부실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

#### 친기업적 지원

그런데 정부는 기업 파산을 막는 데에는 막대한 돈을 쓰면서 노동자를 살리는 데는 별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 정부 지원금은 기업주와 채권자들을 위해 쓰일 뿐 노동자 해고는 막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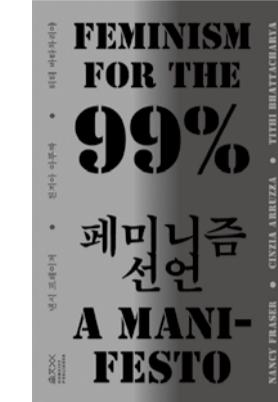
기업주들은 정부 지원을 받는 동시에, 떨어진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 임금 삭감과 해고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가 100조 원 기업 지원책을 발표한



## 서평 | 《99% 페미니즘 선언》

# 급진적이지만 모호한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정치

정진희



99% 페미니즘 선언

낸시 프레이저, 친지아 아루짜, 티티 바타차리야가 공저한 이 책은 지난해 영국과 미국, 스페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출간된 바 있다.

미국의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쓴 《99% 페미니즘 선언》(원제 Feminism for The 99%, A Manifesto)이 최근 움직씨 출판사에서 나왔다.

낸시 프레이저, 친지아 아루짜, 티티 바타차리야

가 공저한 이 책은 지난해 영국과 미국, 스페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출간된 바 있다.

저자는 모두 '세계 여성 파업'의 조직자들이다.

'세계 여성 파업'은 2017년 · 2018년 3월

8일 세계 수십 개 나라에서 열린 거리 시위를

가리키는데, 2016년 10월 폴란드 정부의 낙태

금지 법안에 항의해 일어난 10만여 명의 시위

와 아르헨티나의 여성 대상 폭력 반대 시위 '단

한 명도 안 돼!'(스페인어 약칭 NUM)에서 영감

을 얻었다. 2017년과 2018년 미국의 3 · 8 시

위는 트럼프의 반동적인 여성 정책과 긴축에 대

한 대중의 반감이 동력이 됐다.

이 책은 2016년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

던 힐러리 클린턴,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인

세릴 샌드버그 등 고위직의 엘리트 여성의 실패

하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1퍼센트를 위한 페

미니즘"이라 부르며 거부한다. "급등하는 불평

등과 양립 가능한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계급

과 인종에 무신경하며 우리의 대의를 엘리트주

의나 개인주의와 연결시킨다고 비판한다.

저자들은 환경 정의, 수준 높은 무상 교육, 아

낌없는 공공 서비스, 저렴한 서민 주택, 노동권,

보편적인 무상 의료를 위한 투쟁을 지지하고,

인종 차별 반대와 트랜스 여성 지지, 제국주의

와 전쟁 반대를 천명한다.

그리고 반자본주의 페미니즘이 "99퍼센트의

페미니즘"이라고 선언한다. 여성 · 성소수자 차

별, 인종 차별, 제국주의 전쟁과 지배, 생태 파

괴 등이 자본주의에서 비롯하고, 자본주의 내에

서 일어나는 여러 저항들이 외파로 일어나지 않

는다고 옳게 강조한다. "모든 억압은 각자 구별

되는 형태와 특성을 갖고 있지만, 다른 아닌 동

일한 사회 체제에 뿌리내리며 그에 의해 강화된

다."(161쪽)

여성들의 투쟁적인 운동을 고무하며 자본주의에 맞서 저항 운동들의 연대를 강조하는 것은 이 책의 장점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종식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 지에 관해서는 모호한 몇 마디 말로 넘어간다.

"모든 급진적 움직임이 공동의 반자본주의 혁명

에 함께하기를 촉구"(158쪽)할 뿐이다. 마치 여

러 사회운동들의 연대를 강조하는 것만으로 자

본주의가 끝장날 수 있을 듯한 인상을 풍긴다.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다양

한 저항 운동을 지지하며 운동을 연결시키려

노력해야 하지만, 이런 투쟁만으로 자본주의가

종식되지는 않는다. 이윤 시스템으로서 자본주

의를 끝장내려면 노동계급이 혁명적 투쟁을 통

해 자본주의 국가를 분쇄하고 권력을 잡아야 한

다. 이런 핵심적인 문제를 회피한다면 '반자본

주의 혁명'은 공허한 선언에 그치게 된다.

이 책은 임금 노동에 대한 착취를 노동계급이

체제에서 겪는 피해 정도로만 인식할 뿐 자본주

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하는 힘의 원천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이것은 저자들이 '여성 파업'이라는 개념을

"현 운동의 주요 혁신"으로 가장 강조하는 것과

도 연관 있다. '여성 파업' 개념이 노조가 별이는

파업의 한계를 넘어서며 파업을 '민주화'한다고

주장하지만, 임금 노동 철회부터 시위, 소규모

폐업, 봉쇄, 불매운동 등 상이한 투쟁 형태들을

가가 아찔하게 치솟았지만, 결국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마자 주저앉았다.

그러나 값싼 신용은 "좀비 기업"들의 생존에도 쓰였다. "좀비 기업"들은 부채를 갚으며 연명했지만 그 말고는 하는 게 없었다. 이는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상식이었지만 이제는 주류 인사들도 인정한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십 년 동안 기업들이 값싼 신용을 계걸스럽게 먹어 치웠다"고 지적하며 제너럴모터스(GM) · 포드 같은 자동차 기업들, 노드스트롬 · 콜스 같은 미국의 대형 유통사가 부채에 의존하면서 위험에 처하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글을 쓰는 현재, 지배계급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은 어떤 면에서 보면 2008~2009년에 시행한 조처의 재탕이다. 긴급 금리 인하, 양적완화 프로그램 확대 등이 그런 사례이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도 지난번 위기 때 마비된 주요 경제 영역에 개입했다. 여기에는 기업 어음 시장과 환매조건부채권 시장도 포함된다.(환매조건부채권은 기업들이 [비교적 장기적인] 채권 같은 담보물을 [곧 되산다는 조건으로] 팔아 단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쓰이는 것이다.)

연준은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와프도 확대했다. 이는 타국 중앙은행이 세계경제의 핵심 윤활제인 달러화를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십여 년 전 신용 경색 직후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달러가 씨가 말라서 그런 조처를 취한 것이다.

### 용어설명

#### 통화 스와프

통화 스와프 체결 당시의 환율로 통화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것. 외화가 유출돼 달러가 급하게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한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중앙은행이 해낼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이미 금리는 이례적으로 낮다. 양적완화도 이미 대대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번에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경제에 직접 개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부채를 인수하고 자금을 그냥 퍼주기도 하며,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국유화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개인 계좌로 현금을 일회 지급하기도 했다. 그런 조처들은 정부가 소득을 보장하고 필수적 재화 · 서비스 생산을 조직하는 방향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다.

이것이 더 발전할수록 필요에 따라 생산을 조직하는 계획 경제, 즉 사회주의적으로 운영되는 경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더 분명해질 것이다. 단지 자본주의 국가가 기업을 운영한다고 해서 사회주의인 것은 아니다.

진정한 사회주의 경제는 아래로부터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기본 전제 상당 부분이 뒤집힌 지금 상황은 적어도 그런 그런 목표를 대안으로서 제기하기 좋은 조건이다.

이미 코로나19 위기는 경제 붕괴와 공중보건 위기라는 두 재앙을 헤쳐 나가야 하는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한 연대 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예컨대 북미, 유럽 등지에서는 이번 위기로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직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상호 부조 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혁명가들은 이런 연대를 자본주의의 논리와 완전히 단절하자는 호소로 발전시켜야 한다. 자본주의의 논리는 거듭 실패를 드러내고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설리스트 리뷰》 2020년 4월호 / 번역 김준호

이후 경종이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법인세 · 상속세 인하 등을 요구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과 정의당 · 민중당 등은 코로나19 기간에 한시적 해고 금지 조처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해고 없는 기업 지원" 요구도 하고 있다. 이는 막대한 지원을 받고도 노동자를 해고하는 기업들을 규제하라는 취지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 요구는 기업주의 선택에 따라 해고를 용인하게 되는 약점이 있다.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기업주 · 채권자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지원하라고 요구하며 투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겨레〉 광경수 논설위원은 "노사정, '해고 없는 기업 지원'에 합의하라"는 칼럼을 썼다. 이 글에서 그는 "2008년 금융 위기 때 독일의 '노사정 상생'은 좋은 본보기"라고 했다. 당시 기업이 고용 유지 노력을 하는 대신 노조는 노동시간 · 임금을 50퍼센트 축소하고, 정부가 삼각 협약을 보전했다고 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독일에서 진행된 진정

한 변화는 불평등의 심화였다.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독일에서 2008년 이후 높아져 왔다. 불평등의 심화는 한국을 포함해 OECD 국가들 대부분 마찬가지이다.

한국노총은 최근 항공업을 비롯한 위기 종에 대한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경사노위가 아니라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가 마련된다면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들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 기업과 대화 ·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하다. 정부가 노사정 협의를 추구하는 목적은 노조를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여 양보를 압박하고 저항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임금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주들이 위기의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며 노동자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파산 위기에 내몰리는 기업들에서는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경영주의 재산을 몰수하고, 부채는 탕감하고, 국유화로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과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다 포괄하며 매우 모호하게 사용된다.

2017년과 2018년에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3월 8일 시위는 분명 인상적이지만 이런 시위가 노동계급 운동의 역사에서 새로운 투쟁 형태인 것은 아니다. 노동계급이 교육, 보건, 복지 등을 위해 일터 밖에서 싸운 지는 오래됐다.

'여성 파업'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노동계급 여성들이 다수 참가한 거리 시위 형태인데, 저자들이 이를 '여성 파업'이라 부르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임금 노동과 무보수 노동을 통틀어 여성 노동의 중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노동의 범주를 임금 노동에만 두는 것을 거부"하고 "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 역할로 고정된 무상 노동의 필수적인 역할을 드러내며, 자본이 유용화되 보상하지 않는 활동들에 이목을 집중시"기고, "임금 노동에 대해서도, 노동 문제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관해 포괄적인 관점을 취한다."(34쪽).

#### 여성 파업

여성의 무보수 가사 노동이 자본주의 노동력 재생산에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것과 학교, 병원, 요양기관 등 '사회적 재생산' 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중요한 계급투쟁이라는 지적은 옳다. 그러나 저자들은 이런 영역에서의 투쟁을 제조업 부문의 작업장 투쟁과 부적절하게 대비시킨다.

또, 임금 노동과 무상 노동의 차이점을 흐리는 방식으로 '여성 파업'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용어법이 자본주의에서 노동계급 여성의 가정에서 수행하는 무임금 노동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효과를 낼지는 몰라도, 여성 해방을 위한 효과적인 투쟁 전술이나 전략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노동계급 여성은 임금 노동자로서 파업하는 것과 무보수 재생산 노동을 거부하는 것의 효과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할 수 없다. 전자는 기업 주나 국가관료가 표적이 되고 실제 파업은 자본가들의 이윤에 타격을 가하거나 국가에 정치적 압력을 형성하지만, 여성은 가정에서 돌봄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표적이 분명치 않고 이윤에 타격을 주지도 않는다. 노동계급 여성은 가정 내 무상 노동을 거부하면 그 피해가 자신의 아이나 노부모 등에게 돌아간다는 난점도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차별에 맞선 투쟁을 지지하며 직장 밖에서 일어나는 투쟁에 당연히 관여해야 하지만, 이것이 생산 현장에서의 투쟁이 지니는 중요성을 경시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직장은 단지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간일 뿐 아니라 지배계급의 이윤이 만들어지는 핵심 장소이다.

자본주의를 전복할 수 있는 노동계급의 잠재력은 생산 현장에서 자본가들과 맞는 착취적 관계에서 비롯한다. 자본주의 종식이라는 목표를 성취하려면 다른 사회집단과 구별되는 노동계급 고유의 힘이 바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자체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 또다시 위기에 빠진 쌍용차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 박설

쌍용자동차가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의 투자 계획 철회로 급속히 위기로 치닫고 있다. 노동자들의 앞날은 또다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4월 3일(인도 현지 시간) 마힌드라그룹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올해 초 약속한 쌍용차에 대한 23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마힌드라의 자동차 판매 급감, IT·금융 사업 부진 등으로 그룹 차원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 당장 7월에 만기 돌아오는 700억 원의 채권을 갚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쌍용차는 2016년 이후 적자를 지속해 온데다, 올해 신차 출시 계획도 없다.

마힌드라가 3개월 동안 최대 400억 원의 일회성 자금을 지원하겠다고는 했지만, 이는 한 달 고정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다.

## 구조조정 압박

이런 상황에서 쌍용차 사측이 내놓은 대책은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예병태 사장은 “2009년 법정관리 이후 최악의 비상 시국”이라며 “차질 없는 경영 쇄신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말이 좋아 “경영 쇄신”이지, 노동자들을 혹독하게 쥐어짜겠다는 뜻이다.

쌍용차 사측과 노조(상급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가 지난해 합의한 ‘쇄신안’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금 삭감, 상여금 200퍼센트·성과급

반납, 연차 지급률 하향, 의료비·학자금 지원 축소 등 22개 복지를 중단하고 임금을 대폭 축소했다. 사측은 앞으로 심증팔구 더한층의 조건 악화, 인력 감축의 칼을 빼 들 공산이 크다.

그러나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노동자들은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노동자들은 2009년 부도 사태와 대량 해고 이후에도 임금 억제, 노동강도 강화, 외주화 확대 등 고통을 전담해 왔다.

한편, 쌍용차 사측은 정부에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무상급 노조지도부도 이에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설사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최근 은행수 금융위원장은 “쌍용차의 경영쇄신 노력 등을 감안해 [정부가] 뒷받침할 부분이 있는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 구조조정을 전제로 쌍용차 차본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도 “경영정 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명분 삼아 한국GM에 8100억 원을 지원했다. 노동자 희생을 전제로 사기업 GM의 자본금 조달을 지원한 것이다.

기업이 부도 위기에 놓였을 때 정부의 재정 지원은 필요하다. 일자리 수만 개를 위한 투자는 결코 “혈세 낭비”가 아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은 일자리 보장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엄청난 세금이 채권단에 빚 갚고 구조조정 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

## 11년의 고통이 반복돼선 안 된다

쌍용차는 지난 십수 년간 수차례 위기를 반복했다. 1998년 대우그룹에 매각, 1999년 워크아웃 돌입, 2004년 다



해고, 동료들의 죽음, 생계 파탄 … 끝없는 노동자 고통의 사슬을 끊어 내야 한다

시 상하이차에 매각, 2009년 법정관리 돌입, 2011년 또다시 마힌드라에 매각.

이런 위기가 반복되는 동안 노동자들은 강제 휴직하고, 해고되고, 임금이 깎이고, 끝을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렸다. 그리고 결국 일부는 죽음에 내몰렸다. 체제의 불안정성 속에 내던져진 노동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낙으로 빠질 수 있는지 보여 준 것이다.

지금 또다시 마힌드라는 노동자들을 구조조정의 한파로 몰아넣고 있다. 사측은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지만,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다. 마힌드라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조건을 보장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

마힌드라는 이번만이 아니라 투자 약속을 번번히 어겨 왔다. 2013년과 2019년에 수백억 원의 유상증자(주식

을 새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자본금을 늘리는 것)를 했을 뿐이다.

무엇보다 지금 경영난에 처한 마힌드라그룹은 쌍용차에 대한 장기적 자금 투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쌍용차에서 손 떼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마힌드라 측이 일자리를 보장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이 대량해고된 지 11년이 지났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해고는 살인”인 현실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오는 5월 1일 마지막 해고자들의 복직 완료(업무 배치) 예정을 한 달 앞두고 노동자들은 또다시 구조조정 위기에 처했다.

11년 전 노동자연대가 주장한 대로, 정부가 쌍용차를 직접 소유·운영(국유화)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했

다면 비극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라도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사측에 노동자 고통전가와 경영 실패의 책임을 묻고, 국유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국가에게 요구하는 게 노동자 고통의 사슬을 끊어 낼 대안이 될 수 있다.

##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사실 한국 정부도 쌍용차의 반복적 위기와 비극을 만든 당사자이다. 2004년 쌍용차를 상하이차에 팔아 넘긴 것도(노무현 정부), 2009년 상하이차의 ‘먹튀’를 눈감아 주고 결국 2011년 마힌드라에 팔아 넘긴 것도(이명박 정부) 모두 한국 정부였다.

무엇보다 국가는 일자리 위기에서 노동자들을 구할 경제적 능력과 의무가 있다. 국가는 경제 파탄에서 기업주들을 구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런 돈은 노동자들을 구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는 법정 관리 같은 ‘일시 국유화’와는 다르다. 그런 일시적 조처로는 노동자들은 또 다시 매각을 위해 해고와 조건 악화의 위협에 처할 수 있다.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도 정부가 실소유주로서 매각의 전 단계인 ‘법정관리’를 하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영구 국유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노동운동은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도전하며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제 공황에서 정부는 누구를 구할 것인가? 탐욕스러운 기업주들의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삶을 지켜라! 이를 위한 저항이 필요한 때이다.

## 1조 원 정부 지원 받고 노동자 해고하는 두산중공업

### 경영진 재산 몰수하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국유화하라

## 정선영

3월 말 문재인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두산중공업에 1조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쓰디쓴 눈물을 흘려야 했다.

3월 31일 노동자 700명가량(노조 추산)이 ‘희망퇴직’ 명목으로 직장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두산중공업의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 임원들은 골프 모임을 했다. 2013년 8400명이었던 인력은 이제 6000명가량으로 줄었다.

현재 정부는 파산을 막고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1조 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노동자 1200명 이상 감축을 요구한다. 사측도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두산중공업 위

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10년 동안 1조 2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내면서도, 대규모 미분양으로 위기에 빠진 자회사 두산건설을 지원하는 데에 1조 7000억 원을 투입했다. 게다가 10년 간 배당금으로 6000억 원이나 썼다. 두산중공업의 주식 45퍼센트를 그룹 지주회사인 (주)두산이 가지고 있는 만큼 배당금의 상당 부분이 사주 일가에게 흘러들어 간 것이다.

이렇게 회사의 부실을 자초한 것은 경영진이었다. 그들은 석탄화력 발전과 핵발전 사업을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 투자는 축소됐고, 두산중공업 전체 매출에서 70~80퍼센트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사업 매출은 2015년 5조 1000억 원에서 지난해 3조 7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고, 지구온난화를 낳는 석탄화력발전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사측은 당장의 이윤에 눈이 멀어 이런 경고를 무시했다.

## 탈핵 정책 때문?

두산중공업의 위기가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에서 비롯했다고 보는 주장들이 꽤 있다. 민주당 소속인 창원시 장 허성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 입장을 밝혔다. 안타깝게도 두산중공업 노조도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신한울 핵발전소 3·4호기 건설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탈핵 공약에서 크게 후퇴했다. 애초 공약을 어기고 현재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가 진행 중

이다. 이에 따라 가동되는 핵발전소는 2017년 24기에서 2024년 26기로 증가할 예정이다.

실제로 두산중공업의 핵발전 관련 매출은 2017년 5877억 원에서 2018년 7636억 원, 2019년 8922억 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물론 추가적인 핵발전소 건설 중단은 두산중공업에 타격을 줄 것이다. 그럼에도 전체 노동계급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핵발전소 건설을 지지할 수는 없다.

노동계급의 안전과 두산중공업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해, 두산중공업을 국유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사실 박 씨 일가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은 2000년까지만 해도 공기업(한국중공업)이었다. 게다가 두산중공업은 핵발전이나 화력발전뿐 아니라 풍력이나 태양력 같은 친환경 재생에너

지 발전을 위한 기술도 가지고 있다.

마침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은 두산중공업을 “에너지 전환 전략 공기업화”라는 입장을 냈다. 민중당의 창원성산 석영철 후보도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공기업화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친환경 공약은 후퇴시키고, 노동자들을 희생시키고 있다. 이와는 정반대 방향이 필요하다. 두산중공업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의 재산을 몰수하고, 회사의 부채는 탕감하고,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해 국유화를 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은 노동자들을 살리는 데 쓰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강력한 노동자 투쟁과 연대가 필요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의 국유화를 요구하며 싸운다면 다른 노동자들과 진보진영의 광범한 지지·연대를 이끌어내는 데 훌륭한 효과적일 것이다.





## 광양항 화물 노동자

# 항만 봉쇄 파업으로 통쾌하게 승리하다

이정원

4월 6일 화물연대 전남지부 컨테이너 회의에서 임금 인상 파업이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물류창고로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컨테이너 셔틀 노동자들은 열흘 넘게 광양항에서 물류창고로 가는 출구들을 봉쇄하는 투쟁을 벌였다. 광양항은 2018년 기준 국내 항만 중 부산항에 이어 둘째로 물동량이 많은 항만이다.

최근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국면에서 정부나 주류 언론들은 노동자들이 조건 개선 요구나 투쟁을 자제하고 '위기 극복'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항만 봉쇄 투쟁에 대한 언론의 태도는 비난 아니면 외면이었다.

화물연대의 한 간부는 이렇게 밝혔다. "우리의 요구나 투쟁을 제대로 보도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주류 언론은 무시하고 지역 언론들은 비난만 합니다. 우리 투쟁이 제대로 알려지기를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항만 봉쇄 투쟁은 사용자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됐다. 항만 봉쇄가 지속되자 운송사들은 파업을 "불법 행동"이라고 비난하며 경찰력을 투입해 파업을 진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압박에도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버텼고, 화물연대 전남지부가 하루 동안 연대 파업을 해 600여 명이 항만 봉쇄 투쟁에 동참해 사용자들을 압박했다. 화물연대 본부와 지부 16곳이 파업을 적극 지원했다.

4월 2일 본지는 이런 단호한 투쟁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결국 마지막까지 버티던 운송사들도 4월 6일에 양보를 했다. 노조의 요구였던 운임 50퍼센트 인상(1회 운송료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대략 42퍼센트 정도의 인상을 수용했다.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고 비난했지만,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는 화물업계의 최저임금이 라 말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를 지키라는 요구이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되



(위) 화물연대 전남지부 광양항 파업 집회 모습. 코로나19·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동운동이 갈 길을 보여 주다 (아래) 파업 중인 화물연대 울산지부 노동자들. 화물연대는 광양항 파업 승리 후 울산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는 안전운임제에 따라 컨테이너 수송 화물 노동자들의 운임(임금)은 대폭 올라야 했다. 특히 컨테이너 셔틀 노동자들의 운임은 그동안 말도 안 되게 낮게 책정돼 있던 탓에 68~110퍼센트까지 오르게 돼 있다. 노조는 이보다 낮은 인상률인 50퍼센트 인상을 제시했다.

### 화물업계 최저임금 '안전운임'을 보장하라

안전운임제는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도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화물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 만큼, 노동자들의 열망이 상당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순순히 임금 인상을 따르지 않으려 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을 강제하기 위해 투쟁에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위기가 한층 심각해지자 사용자들은 더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이윤에 타격을 주는 행동에 나서 적잖은 임금 인상을 얻어 낸 것이다. 연대 파업의 효과도 중요했다.

이번 파업의 승리로 노동자들의 기세는 상당히 올랐고, 특히 노동자 수백 명이 노조로 가입하는 성과도 냈다.

### 울산으로 파업이 이어지다

다른 지역의 화물 노동자들도 이번 투쟁을 주시했다.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화물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안전운임제 대상 차량의 90퍼센트 이상이 아직 제대로 안전운임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양항에서 컨테이너 셔틀 노동자들이 운임을 대폭 인상하는 승리를 거둬 매우 기쁩니다. 저 말고도 많은 화물 노동자들이 이 광양의 투쟁을 주목했습니다."

이번 승리에 이어 곧바로 다른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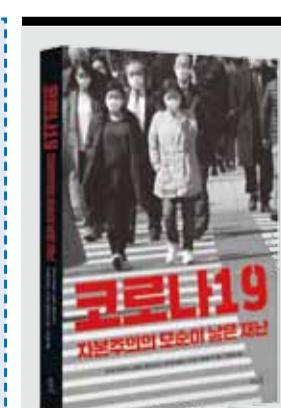
으로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광양항 파업 승리 이후 울산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4월 8일 오전 8시 화물연대 울산지부가 파업에 돌입해,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금호석유화학 출입구 세 곳을 막고 있다.

이곳도 운송사가 안전운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곳곳에서 기존의 운임 요율을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준다면 지역

급을 유예하거나, 새로운 수수료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운임을 깎으려는 꼼수 등을 쓰고 있다고 한다.

광양항 화물 노동자 파업의 승리는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위기로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조건 개선을 위해 싸울 수 있고 성과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이 기세를 이어 가길 바란다.



신간

### 코로나19 자본주의의 모순이 날은 재난

マイク デイビス, 알렉스 캘리니코스,  
マイ클 로버츠, 우석균, 장호중 외 저자  
장호중 역을, 책갈피, 208쪽, 12,000원

## 코로나19 감염 피해 완화를 위한 당면 요구들 (특별재난강령)

2020년 3월 26일, 노동자연대



- ① 코로나19 대응 병원과 그 노동자들에 대한 전폭적 지원: 충분한 보호기구와 휴식, 위험수당을 지급하라.
- ② 필요한 지역에서는 민간병원도 동원해야 한다.
- ③ 사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산업과 서비스 노동자들을 감염에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④ 해고를 중단하라. 비필수 사업장은 휴업하고 온전한 임금을 보장하라.
- ⑤ 휴교로 인한 추가 돌봄 비용을 지급하고, 휴교로 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라.
- ⑥ 독거 노인이나 장애인, 공공시설 거주자들에게 긴급 생필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라.
- ⑦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이주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라.
- ⑧ 정부가 재난생계소득 100만 원을 즉각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라.
- ⑨ 노숙인들에게 안전한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라.
- ⑩ 특정 집단에 대한 속죄양 삼기를 중단하라.
- ⑪ 집회 금지 조치 등 정치적 억압 반대한다.
- ⑫ 상가와 주택 월세 납부 및 부채 상환을 유예하라.
- ⑬ 노동조합은 정부가 이런 요구를 채택하도록 광범한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